

교육의 미래비전과 교육과정 개선 전략¹⁾

미래문화연구소

1. 교육의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인류 역사는 제1의 물결이었던 농경시대(약 3000년)부터 산업시대(약 200년)를 지나 제 3의 물결인 이제 서비스·지식정보 시대를 맞고 있으나 이도 약 50여년 정도 지나면 또 다른 시대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벌써 제 4의 역사 변혁 물결을 사과의 혁명이나 문화 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는 논의도 나온다. 현재 50대는 농경시대에 태어나 산업시대에 교육을 받아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여 이제는 지식사회에서 은퇴를 하고 문화시대에서 노후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한 세대가 일생동안 네 차례의 사회 변혁 물결을 탄다는 일은 우리나라가 아니면 경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한국은 지구촌 200여개 국가 중 변혁의 물결을 가장 빨리 따라왔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변혁은 가속도가 붙은 첨단기술과 경제성장에 대한 열망 및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전 국민의 교육열 등이 있는 데, 이를 모두 묶어 보면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형성이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미래사회예측을 통해서만 미래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외국이나 다른 선진 기업을 벤치마킹하는 재빠른 모방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다. 이 일은 자본이나 기술로만 되지는 않기 때문에 변혁을 이끌어 내는 사과의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이 사과의 혁신도 결국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변혁이다. 그 혁신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21세기 교육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데, 이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 정책은 어떠한가?

미래의 국부(國富)를 결정하는 최고 요인이 인적자본일 것이라는 전망은 바로 교육체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인적자본은 제대로 된 교육체제를 통해 양성되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교육체제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르치며 그 결과를 또 어떻게 검증하는 가를 둘러싼 인적 구성과 물적 시설 및 공간 구조 등 학교 조직의 총체적인 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교육체제의 중핵이 바로 국가 교육과정이고, 그 작동 과정이 수업(교수·학습)이다. 그러므로 국가 교육과정 정책은 거시적인 측면인 학제에서부터 미시적인 관점의 수업 상황까지 모두가 정합성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 조건을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상황은 어떠한가?

'공장같은 공교육 시스템으론 혁신 못해',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2005년도 한국경제의 미래

1) 2005

성장동력을 교육이라고 하면서 내 놓았던 한국 교육의 진단이다.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등·하교를 하는 학교를 그는 공장에 빗댄 것이다. 이런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개인으로 여겨 이질성(다양성)을 인정하고 맞춤형으로 키워야 한다는 게 토플러의 교육관이다. 앞으로 공교육도 산업사회의 한 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리라.

물론 토플러의 진단을 비판할 수도 있다. 학교는 최소 필수 지식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암기도 해야 되고, 현행 등·하교 방식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학습 기회를 주고, 학교를 관리하는 효율성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닌데 이를 두고 공장형 교육이라고 하는 비판은 지나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토플러가 한 진단을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 공교육이 잘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공교육 내실화'를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천명하는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가? 하나의 시스템은 여러 구성 요소와 그 배경 환경으로 이루어진다. 공교육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정부·학교·교사·학생이다. 정부와 학교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유형, 학교 경영의 대외 개방 정도, 우리 사회의 교육문화 등이 공교육의 배경 환경이다. 여기에는 국가의 교육정책, 학교 경영, 교사의 전문성, 학생의 성취도 등이 서로 얽혀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공교육을 혁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방향을 '소명(Mission) → 꿈(Vision) → 공유가치(Shared value) → 전략(Strategy)'이 현실적 실현 가능성과 상황적 적용 타당성 및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갖도록 세우는 것이라고 본다.

1. 국가 교육의 소명과 기본 방향

우리가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소명은 무엇인가? 그 소명이 바로 학교가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상적인 목표인데, 교육기본법은 그것을 다음과 같은 교육이념으로 규정하였다.

第2條 (教育理念) 敎育은 弘益人間의 理念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도야하고 自主的 生活能力과 民主市民으로서 필요한 資質을 갖추게 하여 人間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民主國家의 발전과 人類共榮의 理想을 實現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9條 (學校敎育) ③學校敎育은 學生의 創意力啓發 및 人性의 함양을 포함한 全人的敎育을 重視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홍익인간 → 인격도야·자주적 생활능력·민주시민의 자질 → 인간다운 삶 → 민주국가 발전 → 인류공영'을 위하여 '창의력 계발·인성함양 등 →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도 결국 미래 사회를 가치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인간을 길러 내려고 하는 것이다. 즉 '홍익인간'을 확장 해석해 보면, 이롭게 해 주어야 할 대상은 공간적으로는 인간만이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존재 전체를 아우르고, 시간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미래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이 제시한 교육의 소명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함양된 인성을 갖춘 인재는 모든 존재 자체가 공영할 수 있는 사회 즉 미래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한 마디로 교육의

소명(Mission)은 '미래창조'라고 제안한다.²⁾ 만일 교육의 소명을 이와 같이 '미래창조'라 한다면 홍익인간이나 전인교육의 속성을 좀 더 현실에 맞도록 구체화시킨 것이라 하고, 교육의 비전과 전략 등 이어지는 정책을 세우는 데 선명한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데, 소명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면 안된다.

교육의 소명 - 미래창조(홍익인간, 전인교육) -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 꿈(Vision)은 무엇이라 할까? 이 비전은 정책을 맡은 정권 차원에서 세울 수 있다. 과거 참여정부는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전 국민의 인적자원 역량 강화-'라고 하였고, 현 정부는 비전을 '교육살리기·과학기술강국건설'라 하고 다시 그것을 '교육만족두배·사교육비절반'이라고 표방하고 있다.³⁾ 이 교육 비전은 교사와 학생과 더불어 국민이 보고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방향으로 모두의 역량을 모아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면 교사와 '교육만족두배, 사교육비절반'에서 어떤 가치를 떠올리며 감동할 수 있을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그 대안으로 '스마트학습'이라는 교육 비전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현 정부가 이미 이것을 교육개혁의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연두업무보고서'⁴⁾의 '스마트교육 본격 추진을 통해 세계적 선진 수업 환경 구축'이라는 부문에서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현재(As-is)	스마트 교육(To-be)
(교육내용) 정형화 지식 교과서·참고서 따로	서책형 + 디지털교과서 병용 (교과서·참고서 통합, 풍부한 교육자원 활용)
(교육방법) 교수자 중심, 교실 중심 수업	학습자 중심, 교실 및 온라인 수업으로 확장
(교육환경) 단말기 보급 등 인프라 중점	교원역량 및 정보기술 활용 강화

smart ==S : Self-directed(자기주도적), M : Motivated(학습흥미), A : Adaptive(수준과 적성),
R : Resource free(풍부한 자료), T : Technology embedded(정보기술활용)

이와 같은 스마트교육은 그 자체가 학생이 장차 이루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그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목표와 내용 차원의 smart로 바꾸어 교육과 학습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스마트학습이라 할 이 비전은 학생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의식체제를 표용과 상생의 관계에 필요한 창조적·비판적·체제적 사고'를 하도록 방향을 잡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즉 이러한 목표와 내용을 적시하여 학습의 비전으로 삼게 되면, 정부는 그것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정책적으로 제공하면 된다.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교육 비전이 왜 SMART학습인가?

S :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 M : Mind set 의식체제 / A : And 포용과 상생 / R : Relation & Role 관계와 역할 / T : Thinking 사고력(비판적·체제적·창조적사고)

2)

가
가

3) http://www.mest.go.kr/web/1141/site/contents/ko/ko_0141.jsp / 2013. 1. 14.

4) <http://www.mest.go.kr/web/1104/ko/board/view.do?bbsId=146&boardSeq=38280&mode=view> /2013.1.1.4

S : Sustainability - 물론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계 공통의 시대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持續可能發展, 영어:sustainable development, SD)에서 차용한 것이다. 지속가능성(持續可能性)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현재는 생물학적, 생활 체계와 관련하여 주로 쓰인다. 생태학적 용어로서의 지속가능성은 생태계가 생태의 작용, 기능, 생물다양성, 생산을 미래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간 사회의 환경, 경제, 사회적 양상의 연속성에 관련된 체계적 개념이다. 지속 가능성은 문명과 인간 활동, 즉 사회를 구성하는 수단으로 의도된 것으로, 이것의 옹호자들은 그들의 필요를 절충하고 현재 한도에서 최대한의 가능성을 짜내면서도,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그러한 이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과 활동을 수행한다. 지속 가능성의 개념은 지역의 이웃으로부터 지구 전체에까지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⁵⁾ 1987년에 발표된 유엔의 "우리의 미래"(브룬트란트) 보고서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이것을 정의하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책의 영역인 경제, 환경, 사회 및 문화 다양성을 포함한다. 즉 미래 인류가 생존을 계속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바로 지속가능발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 비전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

M : Mind set 의식체제 - 이 개념은 John Naisbitt의 MIND SET(2006, 안진환·박슬라 번역, 마인드 세트, 2006, 비즈니스북스)에서 차용한 것이다. 그는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여러 사람이 다르게 해석하여 서로 다른 결론을 얻는 것은 '정보때문이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즉 마인드 세트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과 같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온갖 일을 만들어 내듯이, 마인드 세트는 '세상을 보는 눈 혹은 생각하는 방식 또는 관점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데, 우리는 이를 의식체제라고 하였다.

A : And 포용과 상생 - 나와 남을 보는 마인드 세트는 '포용과 상생 - 배제와 상극'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우리는 이를 '도도주의 - 나냐주의'로 부른다. 예를 들어 환경과 경제를 보면, 경제지상주의는 '경제성장이나 - 환경보전이나'라고 하여 두 가지 가치는 공존할 수 없는 상극관계라 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배제시켜 버린다. 물론 극단적인 환경제일주의는 환경을 위하여 경제개발 자체를 거부하고 원시반본과 같은 복고적인 전문명의 삶을 주장한다. 이 역시 배제와 상극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의식체제를 받아들이면 '환경보존도 하면서 경제성장도 해 나가는' 환경과 경제의 상호 포용과 상생을 지지하게 된다. 이처럼 '환경이나 or 경제이나'라는 나냐주의 마인드 세트를 '경제도 and 환경도'라는 도도주의 마인드 세트로 바꾸면 개인과 집단 및 인류 전체의 지속가능성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R : Relation & Role 관계와 역할 - 사실 우리 사람이나 자연 생태계의 모든 존재는 서로 다른 존재와 자연적이나 인위적으로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존재는 모두 그 존재망 속에서 해야 할 어떤 일(역할)을 맡고 있다. 인류 발전은 모든 관계망을 '배제와 상극 → 인정과 공존 → 포용과 상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⁶⁾ 그것은 물론 나와 다른 존재의 존재 자체를

5) <http://ko.wikipedia.org/wiki/%EC%A7%80%EC%86%8D%EA%B0%80%EB%8A%A5%EC%84%B1>

인정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다원주의적 마인드 세트(도도주의)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교육이 해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⁷⁾ 배제와 상극을 포용과 상생으로 우리가 마인드 세트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문명의 진정한 진보이기 때문이다.

T : Thinking 사고력(비판적·체제적·창조적사고) - 문제는 마인드 세트와 같은 생각이다. 길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식 체제에 있다. 무엇을 어떻게 사고하는가에 따라 마인드 세트가 결정된다. 우리는 미래 창조라는 교육의 미션을 이루기 위한 그 사고를 비판적 사고와 체제적 사고 및 창조적 사고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⁸⁾ 나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마인드 세트가 정말 옳은 것인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확실한지부터 꼼꼼이 따져보는 비판적 사고를 하다 보면, 모든 현상은 인과응보(因果應報)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체제적 사고(시스템 사고)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그렇다면 미래를 바람직한 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창조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미래 창조라는 미션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는 교육 정책의 비전을 스마트 학습으로 천명하고, 그것을 국가 교육과정 정책으로 만들어 가기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럼 이를 위한 공유 가치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2. 국가 교육 정책의 공유 가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곧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를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과 같다. 정책 목표를 타당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상황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무엇을 문제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고자 하는 목적 가치와 수단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정해 놓아야 한다. 교육과정 정책이라면 최고 목적 가치는 교육이념의 달성이며, 이를 당면 가치로 보면 실천 가능한 공교육 내실화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수단 가치는 이해관계자의 가치 공유화와 저투자 - 고성과의 효율성이다.⁹⁾ 연구자는 합목적성과 예측 가능성 및 절차 합리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6)

가

(世界一花)가

가

7)

가

가

8) 가

9)

가

(, 2000)

가

가. 합목적성

합목적성이란 모든 정책의 세부 내용이 그 기본 방향인 궁극적인 목적과 맞아야 된다는 것이다. 사실이 조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따질 사안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교육과정 개선 정책의 제일 앞머리에 내 세우는 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나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목적 관념과 달리 현실적인 요구만 반영하기 쉽다는 상황 인식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국가가 바라는 미래의 인간상을 기르기 위하여 학교가 가르쳐야 될 내용과 방법의 밑그림이라는 사실을 소홀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 교육과정 개선 정책 과정에서는 정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고 아닌지를 합목적적인 관점에서 가려내는 지체로운 판단이 필요하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富의 未來』(Revolutionary Wealth, 2006)에서 '모든 지식에는 한정된 수명이 있기 마련이므로, 어느 시점이 되면 지식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닌 것이 되어 무용지식¹⁰⁾ 될 수 있다.'고 지식의 수명론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이건 두뇌속이건 지식이 저장된 곳은 어디나 무용지식으로 가득차 있지만, ...사실이나 아이디어, 이론, 이미지, 통찰은 변화에 의해 뒤쳐지거나 나중에 더 정확한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것으로 대체되기 마련'(p. 171.)이라고 보았다. 국가 교육과정 정책은 이러한 무용지식을 제거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¹¹⁾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과 능력은 무엇일까?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라도 나아가야 될 능력의 방향은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 방향을 외국 사례에서 보자. 미국의 The North Central Regional Educational Laboratory¹²⁾는 21세기 디지털 정보사회를 대비하여 학생들이 갖추어야 될 능력을 디지털 시대 이해력(Digital - Age Literacy), 창의적 사고력(Inventive Thinking), 효과적인 의사소통(Effective Communication), 높은 생산성(High Productivity)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10) 가 (obsoldege) ' (absolote)- (knowledge)'

11) 가

12) (NCREL) was one of 10 federally funded laboratories whose contract to operate ended in 2005. Learning Point Associates conducted the work of NCREL(<http://www.learningpt.org>)



[그림 1] 21세기의 필요 학습 능력

사회가 변동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원리에 따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정리해 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창의성과 의사소통 및 생산성은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강조되는 기능이다.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도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도 큰 문제없이 살 수 있었다. 산업사회에서는 분업조직에 참여한 근로자가 전체 체계 속에서 지시받은 과업만 표준 공정에 맞추어 성실하게 해 내기만 하면 되었다. 별다른 창의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성실성에 따르는 생산성 향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 물론 이 때에도 지식근로자에게는 그와 다른 능력을 갖추도록 주문하였다. 즉 과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평가하고 분류하여 체계화시킨 뒤 새로운 지식 창조에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높은 생산성의 기본 조건이 된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이제 단순히 성실성만으로 살아가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현대 지식기반사회의 발전 조건은 지식의 창출과 활용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적자원은 개인에게 내재된 지식, 정보, 아이디어, 기능, 건강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 능력을 갖춘 인력이 많아질수록 국가가 발전하고, 또 개인도 사회적인 성공을 하기 쉬워진다. 공교육도 결국 이러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인적자원을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며, 그 소양을 과학기술로 국한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끌어 들여야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자원이 되기 때문인데, 이는 사회적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의 합목적성을 가질 수 있다.

나. 예측 가능성

교육과정 개선 방향의 두 번째 준거로 예측 가능성을 들고자 한다. 물론 현대 세계화된 지식기반사회는 내일을 예측하기도 어려울 만큼 변동의 속도와 폭이 극심한 편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측 가능성은 그러한 미래 변동 양상이 아니라, 교육과정 정책 전개 방향과 일정 정도는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만 해도 그렇다. 1980년대 개편된 제 5차 교육과정 이후 약 5여년을 주기로 6차와 7차가 나왔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1997년에 고시된 이후 제 8차 교육과정도 이미 고시되었어야 한다.

문제는 점정적인 5년 주기가 아니라, 교육과정에 따른 전방효과와 후방효과 때문에 그러하다. 비유컨대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철강과 고무 및 정밀 제어장치 등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하여 미리 만들어야 하는 부품의 발전(전방효과)과 정유와 도로 등 완성된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후방효과)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 정책도 전·후방 효과를 갖추어야 새 교육과정을 순조롭게 적용할 수 있다. 전방효과는 대학의 교사 양성 체제를 교육과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교육과정이 언제나 변하지 않거나 개정을 하여도 내용상 별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대학도 교사 양성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교사도 교육과정 개편 전망을 할 수 있다면 사전에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전방효과 외에도 교과서 개발과 학교 시설 구비 및 교사 채용과 같은 교육과정의 후방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교과서 개발이다. 교육과정을 개정하면 발행 제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인정 교과서를 개발하는 출판사는 정책 일정에 맞추어 투자 계획을 세울 것이다. 출판사가 장래 일정을 예견하여야 그 일정에 맞도록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교과서 기간 본의 수정 보완과 새로운 교과서 모형을 개발하는 일은 정규 전문 인력의 상시 고용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전 투자 여하에 따라 교과서 질이 달라진다. 이해 관계자의 교육과정 정책 예측 가능성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번의 교육과정 개선 사업 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더불어 교과서 발행 정책 일정도 같이 제시하여 시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장은 장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투자하기 때문이다.

다. 절차 합리성

국가의 법규는 사실 관계만이 아니라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문제는 가치 판단을 모두가 동일하게 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서로 다른 가치를 주장하는 성원으로 구성된 집단의 의사결정은 대립되는 가치보다 상위의 메타가치를 준거로 삼던가, 아니면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쳐 결정한다. 교육과정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국가 교육과정은 그 개정안을 만들기 까지 거쳐야 할 절차를 모두 거친 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면 그것으로 법규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그런데도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적지 않다. 그 이유는 개정 절차는 거쳤지만 그 자체의 합리성이 낮다고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절차의 합리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육과정 과제에 참여하는 사람의 대표성과 일정의 충분성이 그것이다. 교육과정 개정 절차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 참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지고, 그것은 바로 절차의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대표성을 갖춘 조직의 구성은 교육과정 당사자가 참여토록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즉 교과 교육의 전문적 실천가인 교사 참여 확대가 그 답이다.

II. 국가 교육과정의 정책 유형과 개선 전략

공교육 발전의 목표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 성장력을 발현시키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간을 기르는 일이다. 그 원동력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를 천명한 국가 교육과정에서 비롯된다. 교육과정은 시대정신과 사회상황 및 학교 환경을 반영하면서도 학교와 사회의 예측 가능성과 사전 준비를 위한 안정성을 같이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정책은 주기적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는 혁명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확인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고쳐가는 개선¹³⁾의 산물이어야 한다.

그 근본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정해 놓은 교육과정(curriculum)이다. 정부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학교가 그 중심으로 경영토록 정책을 편다. 한 나라의 정치적 토대가 헌법이라면, 공교육의 헌법은 국가 교육과정이다. 헌법이 국민이 바라는 이념형으로서 국가 미래상을 보여주듯 교육과정도 교육의 미래 설계도와 같다.

교육은 전통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과거와 현재 까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새로운 세대에게 계속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교육은 구성원들이 바라는 미래상을 담아내는 기능도 한다.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고자 하면 교육 목표와 내용을 보면 된다. 교육과정이 바로 목표와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사회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자 하면 그 나라의 교육과정을 보면 될 것이다.

교육과정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를 천명한 교육의 대원칙이다. 그 원칙에는 사회 상황과 학습자 수준에 맞도록 선정된 내용과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및 바람직한 평가 방향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든지 중앙 정부가 국가 교육과정 편성권을 행사하여 학교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간다.

국가 교육과정은 '교육목표·교과편제·내용요소 → 교과서·보조자료 → 교수학습 과정 → 성취도검사'라는 일생주기를 순환하는 유기체이다. 교육과정의 사명은 현재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정도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 사명의 달성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목표 성취도(교육적 효과성 edu-effective)와 투입 자원의 생산성(경제적 효율성eco-efficiency)을 기준으로 교육과정 평가를 상시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수업위기와 사교육 창궐 및 교육이민과 대안학교 등은 국가의 공교육 서비스를 믿지 못해 대체재를 찾는 사회적 불신 신호이다. 정부는 투자예산의 기대효과를 많이 얻지 못하고, 소비자도 학교 밖의 거래처를 찾자니 비용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socially sustainable)이라는 조건을 교육과정이 갖추어야 된다. 물론 교육과정은 모든 문제의 원인도 아니고 완전한 해결책도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용과 방법을 좌우하는 동인이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정부는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목표 즉 비전을

13) (改善) (改正)

분명하게 제시하고, 교육자원을 그것 중심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그것은 바로 국가 교육과정 개선 정책이다.

교육과정 개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육과정 자체의 지향성과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체제가 그것이다. 교육과정은 언제든지 교육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목표를 지향하지만, 물적·인적 자원으로 구성되는 지원 체제는 현실 제약을 넘어서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개선하려면 먼저 현행 문제점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것이 해결된 바람직한 상태가 어떠하기를 기대하는지 즉,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방향과 현실간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 정책이다.

정책 결정자는 현실적 제약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과정도 그 범위 안으로 한정시키거나,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 체제를 그 이상에 맞추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물론 어느 경우에도 그 어느 한 극단만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고, 두 조건 간의 조화 즉, 현 실정에 맞되 전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은 결정된다. 어떤 정책이든 실천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없으므로,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는 그것이 실제 그렇게 되도록 하는 전략도 함께 제시한다.

본고는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며, 어떤 전략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지향성과 현실성을 같이 고려하여 실제 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시킬 것이다. 지향성은 교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도로, 현실성도 참여 정부의 정책 기조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로 구성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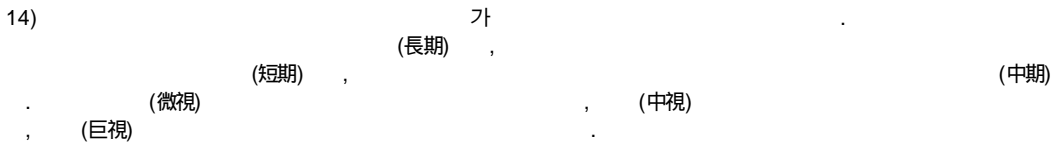
1. 교육과정 개선 정책의 유형

교육과정 개선 정책은 장기 거시적 과제와 중기 중시적 및 단기 미시적 과제로 나눌 수 있다. 그 구별 기준은 교육과정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의 고려 정도이다.¹⁴⁾ 그 변인은 크게는 학제부터 시작하여 작게는 어느 과목에서 가르치는 내용 요소까지 있으며, 그 결정 배경이나 영향력 정도도 사뭇 다른 편이다. 변인별 결정 인자를 무시하고 정책을 펼 경우 개선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책 결정자와 이해 관계자는 먼저 그 변인의 범위를 합의해야 시행하기 쉽다.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이 모든 변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시적인 지평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가. 장기 거시적 과제

학교 상황을 결정하는 모든 요인을 변경시킬 정도로 충분한 기간과 조건을 갖춘 상태를 장기라고 한다. 학제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체제를 거시적인 과제로 들 수 있다.

학제는 '학교 단계와 학교 계통별 학교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대상, 취학 연령, 수학연한, 학교간



의 접속과 분화 관계 및 연계 등(김영철, 2004)인데, 이는 바로 국가 교육과정 수립의 근원적인 준거들이다. 유치원부터 초·중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이르는 학교급 유형과 기간 및 교육목표와 내용 등을 규정한 학제에 따라 교육과정의 방향이 달라진다. 국가 사회의 역사와 현존 상황 및 미래 전망을 담아내는 학제는 나라마다 다 같을 수는 없다.

현재 우리는 유치원의 공교육 체제 편입에 따른 초등학교의 연계성 문제와 지식 기반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초등부터 대학까지 6-3-3-4년제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교육받는 기간으로 설정한 국민공통기본과정에 유치원까지 포함되면 보통교육은 사실상 14년 과정으로 연장되는데, 지식 혁명의 경쟁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 기간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시설과 교사 및 행정 조직 등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 체제도 장기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제이다. 이것은 새로운 의제가 아니라 광복 60년 이후 지금까지 공교육 문제를 토론할 때마다 거론된 것이다. 지난 1996년도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 준비를 맡았던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도 기초 연구의 하나로 시행하였던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평가 연구'(김재복 외, 1996)를 통해 신교육과정 현장 적용의 성공 조건으로 '교사 확보와 학교 시설 구비를 들고, 이를 위하여 다양한 교사 제도와 교육 예산 확보 및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행정 조직 개편을 제안하였었다. 교사와 시설은 많은 예산과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과제이지만, 앞으로 교육과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안이다.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행정 조직 개편은 예산보다도 관련자들의 문제 의식과 정부의 정책 철학에 달린 장기 거시 과제이다.

나. 중기 중시적 과제

중기 중시적 과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교과와 교과 등 다수 변인이 연계되는 일로서 변인 간 수 많은 갈등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변인은 언제나 다층·다원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안이 논쟁 대상이지만, 다음 과제는 법제화나 학교 밖의 변인과 연계되기 때문에 중기 과제로 본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배분 - 이 사안은 중앙과 지방정부 및 단위 학교 사이의 권한 배분 문제이다. 국제적인 추세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설정과 동시에 시행 주체의 자율성 확대 방향 및 '분권화와 시민 참여'를 표방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교육과정 기획은 중앙 정부가 계속 하고, 운영 책임은 지방정부가 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는 공공재를 직접 생산하는 일은 줄이더라도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기획,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배려, 규칙 제정과 경기 심판,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지방이나 민간이 하기 어려운 일은 계속해 나가야 하며, 그 기능을 확대시킬 경우도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와 관련된 모든 일을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권을 지방과 학교에 넘기더라도 중앙 정책 당국의 지원은 오히려 강화 시킬 수도 있다. 지방마다 사회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각 시·도 교육청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정책 기획을 따로 따로 하는 것은 부족한 자원의 중복 투사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연방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각 주(state)가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는 미국과 다른 점이다.

○ 교육과정상 교과 편제 :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 구성과 과목별 이수 단위를 배분하는 것이다. 교과는 교육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교과 교육 분야의 공교육 체제 내 진입과 퇴출 및 통폐합 여부 등의 교과

구성은 교육의 방향을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과 구성은 정부의 교육 정책이나 학교의 바람만이 아니라 대학과 각 종 사회 단체도 관심을 갖는 사안이다.¹⁵⁾ 어떤 교과를 창설하거나 통폐합 하는 것에 따른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교과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서 동시에 대학과 사회단체가 변경 상황에 대응할 여유를 주어야 한다. 즉 준비기간과 다수 집단 변인 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이 사안을 중기 중시적 과제라 하였다.

현존 교과간 이수 단위를 변경하는 일도 교과 간 배분을 둘러싸고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물론 교과를 그대로 두고 전체 학습 시간 내에서 조정하는 일이므로 교과의 존폐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갈등의 정도가 약하다. 그러나 그 이수 단위 정도에 따라 교과의 위상과 교사 수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검토할 변인이 다수라서 미시적 접근으로 되지 않는다.

다. 단기 미시적 과제

단기적인 과제라 하여 정책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변인을 중심으로 조정하면 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변경이 용이하다는 것뿐이다. 앞에서 본 중기 과제는 교육과정상 다수 교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인데 비하여, 한 교과 안의 과목 및 내용 구성 등은 교과 단위의 독자적인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미시 과제라고 보았다. 물론 교과에 따라 내용 조직의 통합 - 분과 문제는 여러 영역이 관련되는 문제여서, 하나의 변인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다른 교과를 기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 전체 차원에서는 미시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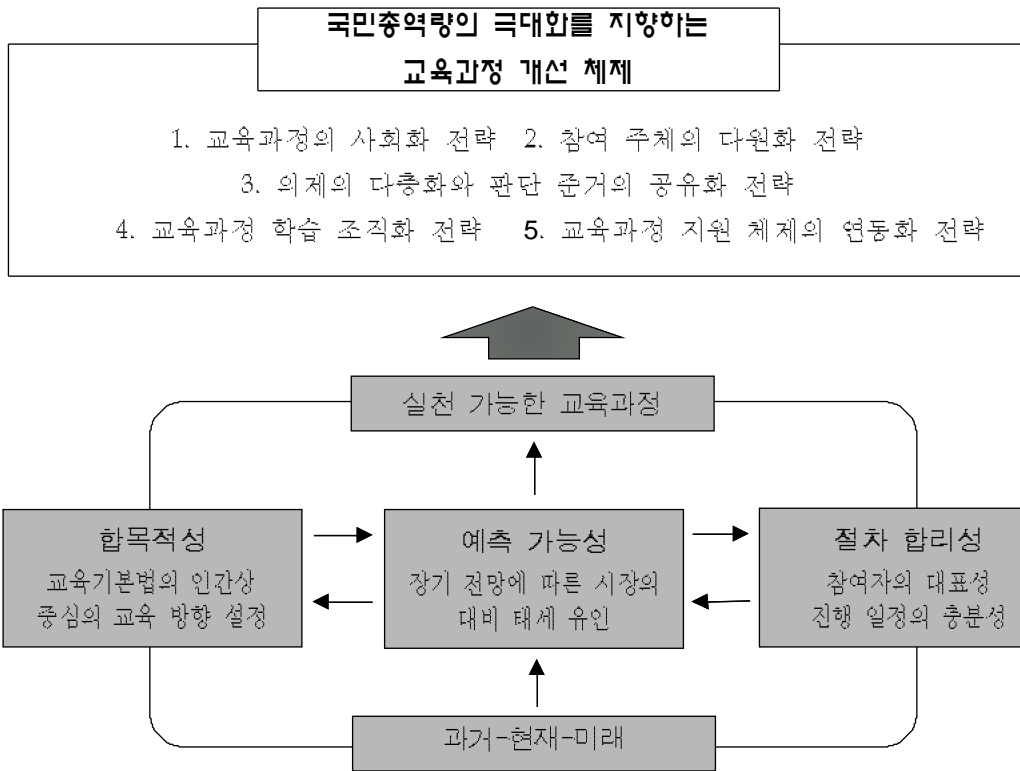
사실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일도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주로 미시적인 차원의 수정 보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과 같이 편제를 대폭 개편한 경우도 있지만, 개정 작업의 실질적인 초점은 내용 요소의 선별과 배분이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을 지방에 대폭 넘기고 심화 선택 과정을 개설하거나 수준별 구성을 한다 하여도, 내용 요소가 변하지 않으면 교육과정 개편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수시 상시 수정 보완 정책은 바로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교수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이 바로 학교 교육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거시적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학교와 사회가 안정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서 적용상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국가 교육과정 개선은 장기 거시적 과제(학제, 지원체제), 중기 중시적 과제(교육과정 편성 운영권의 배분, 교육과정상의 교과 구성) 및 단기 미시적 과제(교과내 과목 및 내용 구성)로 나눌 수 있다. 개선 과정은 합목적성과 예측 가능성 및 절차 합리성을 조건으로 한다. 이런 개선 정책은 교과별 과목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되, 중·장기 과제도 기초 연구를 시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 '교육과정의 사회화, 참여 주체의 다원화, 외계의 다층화와 판단 준거의 공유화, 교육과정 학습 조직화, 교육과정 지원 체제의 연동화'를 제안하며, 전체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5)

가

가



[그림 2] 교육과정 개선 모형

2. 국가 교육과정 개선 정책의 전략

앞으로 교육과정 개정 정책은 주기적 전면 개편이 아니라 수시 수정 보완으로 나가야 한다는 방향은 공론화되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해야 될 정책적 전략은 무엇일까? 정책 전략이란 효율적인 과정을 통해 바라는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 동원과 운영 방법을 말한다. 비전이 없는 전략은 방향성을 잃기 쉽고, 전략이 뒷받침 되지 못한 비전은 공허하여 실천 가능성이 없어진다.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일은 학교 교육 정책의 큰 방향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는 것 인지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그 과정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여 운영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전략적 사고의 최소 조건이다.

그러면 교육과정 개선 정책을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연구자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3대 전략 구성의 요소에 따라 '교육과정의 주체, 논점, 일하는 방식'의 상위 범주별 실천 전략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그 전략은 '교육과정의 사회화, 참여 주체의 다원화, 의제의 다층화와 판단 준거의 공유화, 교육과정 학습 조직화, 교육과정 지원 체제의 연동화'이다.

가. 교육과정의 사회화 전략

교육과정은 과거의 역사적 전통과 현재 상황 및 미래 전망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국가 사회의 이념과 철학을 반영한 공론이어야 한다.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인간상은 우리 국민의 미래 모습이며, 그 성취 정도에 따라 국가 발전이 결정된다. 현재 운영하는 곳은 학교일지라도 교육과정은 교육계와 학교 내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공의 지적 자산이다. 이렇게 교육과정이 국가 교육 정책과 사회 발전의 근간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것을 인지한 사회 각계가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 결정 과정의 참여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과정의 주체가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 일반이라는 반증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의 사회화(16)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의 중요 전략이다.

교육과정을 사회화 하여도 학교교육 자체는 고유한 위상을 잃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가 사회적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회 단체와 네트워킹을 조직하여 정보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과정의 외연 확대는 발전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사회변동을 반영한 시대정신의 도입과 다양한 책임 주체의 연대망을 구성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는 세계은행이 밝힌 바와 같이 '지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지식 창조 혁명, 통신 비용의 획기적인 감소로 인한 지식 확산 혁명, 다양한 가상 조직이 등장하는 조직 혁명'이라는 3대 지식 혁명(17)을 겪고 있다(장대환, 2004).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체제 변혁과 맞물린 평생동안 자기주도적 학습이 필요하므로, 교육과정도 이를 반영하는 체제로 개선되어야 한다. 피터 드러커(2001)도 현대 지식사회의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든 사람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체제 개방화로 전환하여 내용 지식만 아니라 방법에 대한 지식도 가르쳐서 수준 높은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다른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서로 협동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학교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자체 변혁을 해 나가야 하는데, 드러커가 제안하는 사회와 학교의 연계 및 평생교육에 필요한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 등은 학교가 사회와 통로를 만들어 변동에 대응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정 사회화의 두 번째 조건인 참여 주체의 다원화는 이어서 보기로 하자.

나. 참여 주체의 다원화 전략

교육과정을 학교 내부에서 사회화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도 당연히 다원화 되어야 한다. 물론 교육과정의 제일 책임 주체는 교사이다. 그리고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시·도 교육청과 총괄적인 기획과 정책 결정을 하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심의하는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역시 공동 책임을 지는 교육과정의 주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교육부 장관이 위촉한 교육과정심의회원과 운영위원 및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연구기관과 각종 위원도 공적인 자격을 가진 참여 주체인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 밖에 교사 양성과 교과의 배경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 및 사회 각계 각종 비록 방계(傍系)이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의 관련 공동 주체라 할 수 있다.

16) 가 가 가 가 (前) (回向) 가 가
17) (前) 가 가 가 e-learn 가

교육과정 개선의 참여 주체를 다원화하는 전략은 바로 이러한 관련자의 연대망을 구축하고, 각자가 소임에 따라 의사 결정에 참여토록 공적인 통로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폐쇄된 공간에서 제한된 범위의 인력을 동원하는 정책 결정을 지양하고, 다원적 구조가 동참하는 공개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 개선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다원화 전략이다. 이 전략은 공식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절차에 따라 활동케 하는 경우와 시민의 자발성에 터한 비공식 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는 사례를 통해 구체화된다. 다양한 주체의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현 학교 교육의 문제의식 공론화(모든 주체의 개방 참여) → 교육과정 개선 요구 의견 제출(모든 주체 - 공식적인 절차 준용) → 국가교육과정심의회 심의(개선 의제 포함 여부 의결) →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의 대안 연구 → 교육과정 개선 시안 확정(국가교육과정심의회) 및 고시 → 교수·학습 자료 개발 참여(교과서 또는 보조 교수학습 자료 등) → 교육과정 질 관리 평가 체제 운영(민관 합동 위원회) → 교육과정 개선 요구 의견 제출' 등의 순환 고리를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 대중과 사회단체는 정부에 교육과정 개선안을 문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심의 결과를 되돌리고, 정책 자문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를 확대하여 학교와 사회의 공식 통로를 만들 수 있다면 교육과정의 사회화를 위한 참여 주체의 다원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 의제의 다중화와 판단 준거의 공유화 전략

학교 교육과 관련된 다중이 모여 교육과정 개선 준비를 한다면 무엇을 논점으로 선정해야 할까? 교육 문제를 거시적으로 접근하면 사회 전반의 구조적 특성으로 확산되고, 미시적으로 보면 한 시간 한 시간 수업 과정의 교사와 학생 관계로 좁아진다. 연구자는 이미 앞에서 교육과정의 의제를 장기 거시적, 중기 중시적, 단기 미시적으로 나누어왔다. 그런데 이 세 부문도 교육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본 것일 뿐 근원지는 같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는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번 교육과정 개선 정책도 의제를 다층화하여 교육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여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제안한다.

의제(agenda) 다층화란 교육과정을 매개 고리로 삼아 교육 문제의 본질과 현상을 동시에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 현상은 다중 요인의 상호연계망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만 따로 떼어 개선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학교 교육의 미래가 '공교육 체제의 문제 확산 → 학교 혁신의 사회적 요구 증대 → 교육과정 개선(내용 적정화와 방법 혁신 및 평가의 효과성) → 공교육의 사회적 신뢰도 증대 →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 → 공교육 발전'의 선순환 고리로 가야 되는데, 만일 '학교 혁신의 사회적 요구 증대 → 교육과정의 전통 관례 고수·불변 → 학교 신뢰도 저하 → 학교의 강력한 대체재 확산 → 공교육 수요 감축 → 학교에 대한 국가 사회적 지원 약화 → 공교육 쇠퇴'라는 악순환적 시나리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학교 체제부터 교육과정의 구조 및 과목별 내용에 이르기 까지 현실적인 문제를 의제로 삼아 모두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올바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본안의 주제인 교육과정 개선도 우선은 교과내의 과목 편제와 내용에서 시작하되, 교과 구성 체제와 지원 조건 및 학제까지 정부는 순차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어떤 의제든 대안을 찾기 위한 판단 준거는 같아야 된다. 즉 대안의 세세한 내용은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해결 방안이 지향하는 가치는 다를 수 없다는 뜻이다. 교육과정 문제라면 당면한 지향 가치는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 - 전인교육을 대전제로 한 공교육 내실화라 할 수 있다. 공교육 내실화는 이제 공

급자 중심이라는 전통적인 고정 관념을 넘어서서 교육과정을 열어두고 언제든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체제로 접근해야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면 매일경제신문과 한승희 교수(2000)가 ‘학습혁명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참이라고 믿고 있던 ‘지식은 가르치는 것, 돈만 있으면 교육은 해결된다는 재정만능주의, 교육은 국가가 독점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육과정 문제 해결의 공통 판단 준거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학습권(수요자 요구)’이라고 보고자 한다. 한 예로 현안 쟁점 중 ‘주 5일제 학교에 따른 수업 시수 조정’ 문제를 보자. 이 문제는 학습권과 교수권, 교과와 교과 등 구조적인 갈등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현 상황에서 수업 시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는 교수권보다 학습권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교수권에 앞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학습자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교육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주장이다. 물론 이것이 교사는 자신의 교육철학이나 국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학습자가 바라는 것을 무조건 들어 주어야 한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지만, 수요를 충족시켜 줄 때 학습 효과가 커 질 것은 분명한 일이다. 학생의 수요도 합리성과 타당성 및 장래성이 있는 경우를 가려 교육에 반영해야 하는 데, 정부가 교육과정을 구성하거나 교사가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할 때 이를 고려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중요한 책무라 할 수 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헌법이 보장하는 이유도 이런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한을 준 것이다.

라. 교육과정 학습 조직화 전략

현재 교육과정 개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정부가 한 번 개정한다고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안은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과정 개선 작업은 현재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수시·상시로 해 나갈 상설 과 제이지, 일회성 정책 이벤트가 아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비전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으로 수시 보완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교육과정 주체의 학습 조직화를 그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조직은 공동관심사를 가진 구성원들이 공적·사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며 지식을 창출해 가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이 조직은 산재된 정보를 공유하여 학습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고, 전공이 다른 구성원 사이에는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을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문제는 학습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이다. 그 방안으로 시·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교과별 교사 연구회, 학회 및 사이버 교사 공동체 네트워크 등을 들 수 있다. 교과별 교사 연구회는 전국 망을 구성하여 시·도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과정 관련 학회는 대학과 초·중등학교를 연결시키는 통로 구실을 할 수 있다. 사이버 교사 공동체 네트워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수·학습 센터에 거점을 두고 구성하여, 교과별 비상임 운영위원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교사와 교수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교육과정 실천의 성과를 안내하고 문제를 진단하며 대안을 공동으로 제안할 수만 있다면 형식 요건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학교와 사회가 연대하여 교육과정의 책임 주체가 확장되는 경우에 일의 성과는 의사 소통을 위한 정보 교류 활성화 여부에 달려있다. 즉 ‘정부 ⇄ 학교 ⇄ 학부모 ⇄ 학계 ⇄ 사회단체’ 간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정부가 개정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주체가 동일 공간에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직접 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교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다중간의 정보 교류를 어떻게 다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 학습 조직망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조직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모니터링을 하도록 제도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 교사를 학교급과 전공별로 나누어 구축한 이메일 전달 체계를 만들어 볼 수 있다.¹⁸⁾ 그리고 의사소통의 창으로 사이버 교육과정 정보 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는 굳이 헌법의 청원권¹⁹⁾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국민 다중이 교육과정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교육 혁신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마. 교육과정 지원 체계의 연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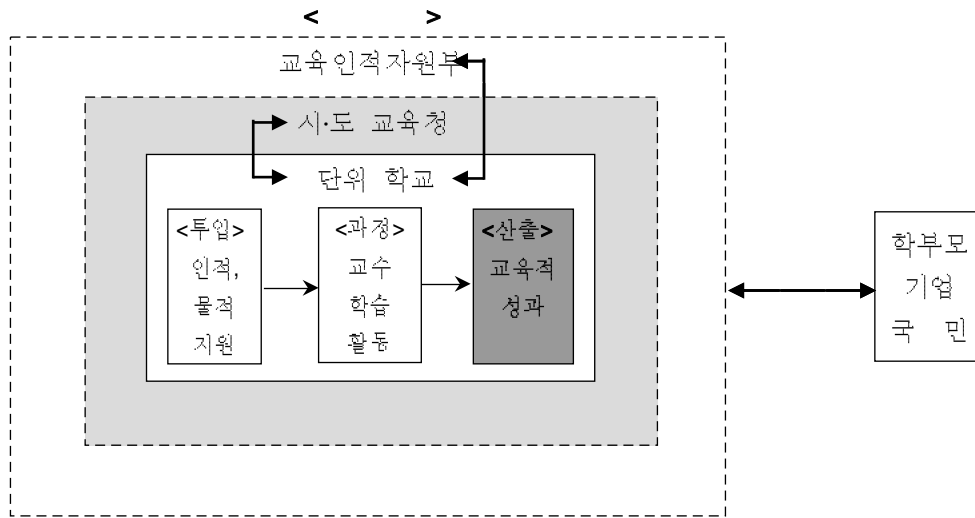
지금까지 정부가 일곱 차례에 걸친 개정 교육과정을 투입하여도 학교가 그 취지대로 실천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제 7차 교육과정만 하더라도 학생의 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학습과 다양한 선택 과목 제도를 도입한 첨단 모형이지만, 공교육 불신 상황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것은 교육과정의 문제인가 학교 환경의 미비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에 기인된 것인가? 어떤 문제이든 그 이유에 대한 명료한 인식이 있어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낼 수 있다.

정부가 문서로 고지하는 교육과정이 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과정 개정과 지원체제 변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교육과정만 앞서 가는 형국이 되어, 학교와 사회는 정부의 교육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과정 연동 체계는 그래서 중요한 성공 요인인 데, 많은 변인이 걸려 있으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시적인 과제로서 정부의 교육과정 정책 상 책무와 관련되는 것이다.

윤정일(2004)은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 체제를 교육의 핵심이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이고 궁극적 목표가 학업성취도를 포함한 교육적 성과를 산출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림 2]의 책무성 개념 모형을 제시하였다. ① 교육체제와 학부모, 기업, 국민 간의 관계, ②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 간의 관계, ③ 교육인적자원부와 단위학교 간의 관계 중에서도 학부모, 기업, 국민 등 교육 수요자가 단위학교에 교육적 성과를 요청하는 책무①가 바로 교육과정 운영과 직결되는 것이다.

18)

19) “ .” (26) 가 가 . 가



[그림 3]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 체제

출전 : 윤정일(2004)

교육부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교에 투입하면, 그에 따른 인적(교사)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갖추어 주어야 학교가 취지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단위 학교의 교사는 교수 학습 활동을 통해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그 결과 성취 정도를 평가한다.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사회는 당연히 높은 수준의 성취도를 학교에 요구하지만, 학교마다 성과는 같지 않다. 그 이유는 학생과 교사 자체의 능력과 노력 정도도 있고, 학교가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 요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교사 수, 교실 수, 기자재 구비 정도, 학교장의 경영 방향 등 개별 교사를 넘어서는 학교 자체의 요인도 결정적인 몫을 할 수 있다.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자체의 문제일 경우에 학교는 학부모와 더불어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체제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편 사업을 한다면 투입과 과정 관련 지원 체제도 같이 연동시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사실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의 설계도라 하여도, 그것을 뒷받침 하는 체제를 구비하지 못하면 실행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영어와 수학을 수준별 이동 수업으로 하고자 하여도 교사와 교실이 부족하면 할 수 없으며, 더구나 수분별 이동 수업을 우·열 개념으로 이해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선택 과목도 장식용이 아니라면 학생이 바라는 과목을 개설해 주어야 하는 데 바로 전공별 교사 수급 문제가 뒤따른다.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은 바로 교육과정과 지원 체제의 연동화와 정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 지원 체제의 연동화 전략은 '학교 경영 시스템, 교과서와 교사 양성, 관련 법규와 대학 입시제도 등과 직결된다. 그 중에서 학교 경영 개선안을 보면 이미 '관리 중심 행정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의 행정 체제로 전환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인적 물적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또 다른 조건으로 '시·도 교육청, 학교의 재량권 확대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및 학교(개별 교사 포함)의 역할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물론 이런 일을 수행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빠트리지 않았다. 이

모든 조건은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요인이며, 이를 갖추어 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행정상 책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양한 지원 체제 중 교육과정의 내용을 가르치는 일과 직결되는 조건 한 가지만 덧붙이고자 한다. 교사의 교재 제작 지원 방안에 대한 것이다. 교육을 직접 하는 교사가 학교와 학생 상황에 맞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가장 잘 안다. 예를 들면 수준별 교육의 경우, 교육과정 문서에 심화 내용을 제시하여도 학생 실제 수준에 맞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탐구 사례를 들 때도 학교 환경에 맞아야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교수학습을 실제로 하려면 교사가 필요한 자료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교과서 사용 조건은 지키면서, 교사가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방법과 예산 지원을 하고, 정부도 표본적인 보조 자료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도 좋은 지원 체제가 된다.

Ⅲ. 결론

국가 교육과정 개선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면서 연구자는 교육의 소명(mission)을 ‘미래창조’에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Vision)을 ‘스마트학습(Smart learning)으로 제안하였다.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가 공유한 가치를 ‘합목적성·예측가능성·절차합리성’의 세 가지로 설정한 다음,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정책 전략은 ‘교육과정의 사회화, 참여 주체의 다원화, 의제 선정의 다층화와 판단 준거의 공유화, 교육과정 학습 조직화, 교육과정 지원 체제의 연동화’의 다섯 가지로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중심으로 연구자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은 새로운 사회체제와 시대정신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자기 변혁을 해 나가야 한다. 그 변혁 과제를 해결하는 기간은 장기(학제와 지원체제 등)와 중기(교육과정 편성 운영권 배분 및 교과 구성 등) 및 단기(과목 구성과 내용 요소 선별 등)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수시 상시 수정 보완 체제는 단기 미시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하되, 중장기 과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이번 교육과정 개선을 계기로 학교 교육이 자체 변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가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수는 있되, 학습이 없다고 할 정도의 비판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교수와 더불어 학습이 살아있는 학교가 되도록 거듭나야 한다. 교과서에 주어진 내용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그 기억력을 검증하는 방식은 학습은 없고 교수만 있는 왜곡된 교육문화를 산출할 뿐이다. 이런 기층문화를 그대로 두고서는 교육과정을 아무리 자주 이상적으로 개편하여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목적 → 교과 교육의 목표 → 학습 내용 → 교수·학습 방법 → 평가’에 이르는 교육의 과정(過程)을 합목적성에 따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는 것을 최고 가치 기준으로 설정하여 공유해야 한다.

교육을 개인의 인성형성이라는 내재적 가치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공교육 체제의 교육은 그 이상의 국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일 인적자원 양성이라는 외재적인 가치면에서 비전과 전략을 찾아야 된다. 사회비전 2030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 부문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핵심교과 위주로 운영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한다. 과목수와 학습내용을 줄여 단순지식의 단편적인 제공을 지양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생활중심 커리큘럼으로 재구성한다.” (p. 62)

공교육 발전을 위한 이러한 전략은 국가 교육과정 개편과 학교 상황 개선 및 교수·학습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이는 교육과정 체제변혁과 교육주체의식변혁 및 이를 토대로 한 학교교육 시스템 혁신을 대전제로 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 사회 전반의 교육문화를 혁신할 수 있다. 사회 2030이 천명한 창의적 인적 자원과 기회가 보장되는 교육도 정부 부문만의 혁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공적인 시스템 변혁과 더불어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비전을 실현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은 웬만한 문제가 있더라도 바꾸기보다 그대로 가는 것이 안전하고(경로 의존성), 다수의 행태를 따르는 것이 사회생활에서 소외당하지 않는 방법(집단 동조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우리 교육(과정)에는 이미 광복 후 60년의 전통을 집단 경로로 삼아 변혁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구조적 특성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벗어나는 길은 교육 공동체가 시대정신과 사회상황을 늘 받아들이는 개방적 자세로 교육과정의 사회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미래전망을 밝히기 위해서는 집단 경로 이탈도 필요하며, 이를 위한 비전과 진행 계획을 밝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그동안 자리 잡았던 학교 절대시의 막연한 고정관념, 매물비용의 함정에 얽매인 현상유지 주장, 외부 동향에 눈감은 자기중심적 영토수호 의지 등 교육의 경로 변환을 가로막는 동굴의 우상을 타파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육과정 수시 보완 정책이 그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

/

< 참고 문헌 >

- 장근복(2000). 정책분석론(개정판), 대영문화사.
- 김영철(2004), "지식기반사회의 학제 발전 과제", 지식기반사회의 학제 발전 방안 정책 토론회 (자료집 RM 2004-42), 한국교육개발원.
- 김재복 외(1996).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평가 연구 - 제 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
- 매일경제신문사(2000). 학습혁명보고서. 매일경제신문사.
- 윤정일(2004). "한국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반성과 과제", 한국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반성과 과제 (제32차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육행정학회.
- 장대환(2004), *Knowledge Driver*, 매일경제신문사.
- 정책기획위원회(2006). 사회비전 2030 선진복지국가를 위한 비전과 전략, (주) 아랜트.
- 피터 드러커(2000) / 이재규 역(2001), 이노베이터의 조건, 청림출판.
- John Naisbitt(2006). *MIND SET* / 안진환·박슬라 옮김(2006), 마인드 세트, 비즈니스북스.
- Toffler, A., Toffler, H.(2006). *Revolutionart Wealth*. / 김종웅 옮김(2006). 부의 미래, 청림출판.
- Weinert, F.E.(2001). "Concept of Competence : A Conceptual Clarification", Rychen ,D.S. & Salganik, L.H.(eds),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Seattle : Hogrefe & Huber Pub.